

나주 비료생산업체 ‘가축분뇨 원정 불법 살포’ 파문

광산 농지에 과다 액비 수개월째 빗물 등 희석돼 환경오염 ‘우려’ 배출신고·성분검사 인증 못받아 광산구, 업체고발·성분검사 의뢰 업체측 “잘못 인정…조사 받겠다”

최근 나주 한 비료생산업체가 가축분뇨(액비)를 ‘불법 원정 배출’했다 지자체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담당 기관에 가축분뇨 배출 신고와 성분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단체는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광주 광산구·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 왕곡면에 위치한 A 비료생산업체가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광산구 삼도동 한 농지에 액비를 불법으로 과다 배출했다. 이 업체는 살포를 요청하지 않은 논에 액비를 뿌리고 난 뒤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자신의 밭에 액비를 받은 논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농주는 본인 땅을 미나리 재배 농민에 임대했는데 갈수록 토양이 검게 변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를 진행 했으며 밭에 성분이 불분명한 액비가 과도하게 뿌려진 것을 확인했다. 그 사이 불법 액비는 빗물 등과 희석돼 지하수·천으로 이미 흘러 들어간 뒤였다.

임대한 미나리 재배 농민은 “돼지 똥을 뿌려준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기존에 알던 액비와 달리 까만색이어서 이해가 안됐다. 이게 토양을 오염시킬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농주 김모씨는 “임대한 논을 찾아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고 도주하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내 논이 피해를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물과 희석해 뿌리면 확인할 길이 없다.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사용하면 2~3년 내 그 토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만다. 확실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분뇨재활용·비료생산업 두 업종에 등록된 A업체는 광산구에 가축분뇨 배출 신고와 성분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액비는 전국 어디에나 뿌릴 수 있지만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A업체는 구에 아무런 절차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가보니 불법 배출·울타리 미설치 등 위



최근 광주 광산구 삼도동 인근 밭에 한 비료생산업체가 액체비료(동그라미)를 과다하게 살포했다. 독자 제공

법성이 파악됐다. 성분도 확실하지 않아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액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포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시료 등을 채취해 부속도 검사 등 적법성을 확인해 ‘시비 처방서’를 받아야 한다. 살포 후엔 울타리를 치는 등 액비

가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광산구는 지난달 광주시에 A업체를 고발조치 했으며 나주시에는 A업체에 대한 조사와 액비 성분 검사 등을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액비 살포 신고를 하

지 않은 것이 맞다. 통장·농민들은 비료를 무상으로 살포해 주니 좋아한다. 그래서 안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회사제품은 비료생산 허가를 받아 전국 어디에나 뿌릴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는 가축분뇨 폐기물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에 해당 한다며 관할 기관 적절한 규제·관리를 요청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액비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나 주요 하천 등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농작물 또한 노랑게 말라죽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비점오염원인 분뇨는 산단·공장의 오·폐수처럼 명확한 출처가 없어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하천에 방류될 시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폐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약처럼 액비도 정량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관리하면 감독하기 수월하다. 전산화가 진행된다면 액비 생산 시작점인 축사 분뇨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성현·김상철 기자**

“112 허위 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내년 6월부터

112 장난 신고를 하면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이 사건현장에 뛰어 들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14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 기본법에는 112 거짓·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그간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 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다. ‘위해가 임박할 때’만 긴급출입했던 것과 달리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해졌다.

경찰이 자살이나 가정 폭력 등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 피해 장소인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헬리원 참사’처럼 사회적 재난 우려가 높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 등이 긴급 피난을 명령하도록 경찰 지휘관의 사고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연간 2000만건 신고를 처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3년 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균등한 의료기본권 보장, 선택 아닌 필수 개선의 첫걸음, 전라남도 국립의과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4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나건호 기자

복지 사각지대 주민 고독사 잇따라… ‘흠뻑한 복지망’ 절실

북구서 70대 등 매년 200명

광주·전남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고독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A(7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층에 사는 세입자로부터 ‘A씨가 이를 전부터 전화해도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열흘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주로 집안에서만 활동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58분께 순천 향동 한 빌라에서 주민 B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간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자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47년간 홀로 돌보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고독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산을 보유한 B씨도 복지망을 비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각 551명, 503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는 △2017년 105명 △2018년 104명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이다. 전남은 △2017년 77명 △2018년 87명 △2019년 101명 △2020년 114명 △2021년 124명이 사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추진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어

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정책 기반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세우고 관련 32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

전남도 역시 도 역점사업인 ‘맞춤형 서비스사업’과 연계한 3개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하고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확대를 연중 1회에서 2회로 확대 △도 및 시군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시행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인구비중이 중장년층, 노년층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1인 가구 또한 34.5%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인원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고독사 위험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골프장 저류지 저수용량 늘린 나주 골프장 관계자 송치

무단으로 골프장 내 저류지 저수용량을 늘린 나주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나주 모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골프장 9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물을 담아두는 저류지를 불법으로 확대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저드 저수용량을 기존 1만 9000여톤에서 6만7000여톤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나주시는 당초 골프장 측에 저류지 4개소, 면적 1만2988㎡, 저수용량 1만9368톤, 총 깊이 3m로 개발을 허가했다.

골프장 측은 곧바로 시에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 4개 저류지를 1개소로 축소한 대신 면적으로 그대로지만 저류지 깊이를 9m로 확대해 저수용량을 6만 6964톤으로 3배 가량 늘리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저류지 조성 과정에서 재협의를 한 9m보다 7m가 더 깊은 총 깊이 16m로 불법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해저드의 하루 쪽 농업용 저수지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일 1918톤의 용수 공급이 끊기면서 부족해진 잔디관리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 측이 저류지를 불법증축했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됐다.

시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골프장에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민섭 기자**